



# 자율과 경쟁이 교육의 붕괴를 극복하는 길이다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

## 1. 서론

오늘의 세계는 지식력을 강조하는 지식기반사회, 국가간에 벌어지는 무한경쟁 속에서 국가마다 자국의 생존을 위해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 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그 핵심적인 전략을 교육의 수월성 추구에서 찾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미국의 교육개혁에서 볼 수 있다. 1983년 레이건 대통령 시절 '국가의 위기'를 선언하면서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한 교육개혁에 착수한 이래, 현재 부시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낙오자 없는 교육정책'에 이르기까지 자율과 책무성, 그리고 학교 선택권을 강조하는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획일적인 교육의 하향평준화로 초·중·고등학교를 비롯, 연간 수만 명의 학생이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교육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 무엇이 우리의 교육을 이처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가? 그것은 자유로운 경쟁과 선택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때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고교평준화와 대학입시제도를 꼽을 수밖에 없다.

## 2. 획일화된 고교 평준화 제도는 다양화로 바뀌어야 한다

1969년 중학교 입시제도 폐지와 1974년도 고교평준화 조치는 과열 입시문제의 완화와 중등교육의 보편화 등 나름대로 한 세대의 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보다는 교육의 양(기회)에 더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교육의 수월성을 가로막고 말았다. '만인을 위한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도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현실로 입증된 것이다. 추천방식에 의한 학생 배정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박탈되고 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자율운영권이 제한되었으며,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업진행을 할 수 없게 되어 교육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로서의 생존과 특성 있

“

국가는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교육의 최저선을  
 계속 높여나가는 역할과 책임을 지지만 그 이상의 높은 수준이나  
 좋은 질의 교육을 받겠다는 국민 개개인의 요구와  
 자발적인 노력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도 갖지 못한다.

”

는 역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정치적인 구호로서 '인간은 평등하다' 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교육적 현실로 보면 만인은 평등하지 않다. 교육에서의 만인이 평등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여러 선진국들은 평준화 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 학부모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 취미, 능력 또는 재력과 그의 의사에 따라 자녀나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자주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은 민주 국가의 특색이다. 획일적 교육정책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평등한 기회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의 고교 평준화 정책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을 통한 교육의 수월성 추구라는 방향에서 속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 수월성의 추구는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강화, 사학교육의 자율화와 특성화, 상향적 평준화정책의 추진, 고교 체제의 다양화 등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교육의 수월성이 보장되는 학교 제도가 정착되면 빈부격차를 운운하는 호된 사회적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학교에서는 능력은 있지만 비싼 수업료를 부담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하여 충분한 장학금을 제공하면 된다.

사립학교를 완전 자율화시켜 따로 과외를 받을 필요 없이 학습 역량과 학업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되게 하여야 한다. 학교에 따라 필요하다면 저녁 늦게, 새벽 일찍 학교 교실에 불이 밝혀져도 나쁘지 않다. 공립학교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는 기관으로서 평준화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사학의 도전을 받고 사학과 경쟁함으로써 계속 질을 높여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교육의 최저선을 계속 높여나가는 역할과 책임을 지지만 그 이상의 높은 수준이나 좋은 질의 교육을 받겠다는 국민 개개인의 요구와 자발적인 노력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도 갖지 못한다.

### 3. 대학의 학생 선발은 완전히 학교자율에 맡겨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입시를 둘러싼 제도들은 지옥을 연상시키게 할 만큼 불필요하게 학생들의 고통을 증폭시키고 있다. 물론 고통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고통은 작을수록 좋고 또 같은 정도의 고통이라면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대학입시가 학생들에게 주는 고통은 불가피한

것인가? 그 고통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고통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대학입시의 고통은 입학자 선발방법에서 출발한다. 어떤 학생이 자기 대학에 필요한 사람인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주관적 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 결과 자기의 발전에 필요한 대학인지 또 대학의 발전에 필요한 사람인지 여부보다는 어떻게 하면 타인들의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부정 선발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 선발 방식이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대학간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데서 출발한다. 대학간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그 특성에 알맞은 학생을 선발 하는 방식보다는 선발자가 의심을 받지 않을 방법, 즉 객관적 평가라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학생 선발 방식이 이리하다보니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특성 있는 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없이 되고 만 것이다. 대학마다 백화점식 학과가 경쟁적으로 설치되어 많은 학과들이 학생의 장래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그저 졸업장을 주는 데 그치게 되었다. 그 결과 수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미래와는 별 관계도 없는 엉뚱한 공부를 하느라 고통을 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하버드 대학의 입시는 어떤가? 학력평가시험(SAT)의 결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 말고도 출신학교의 전통, 과목별 성취도 등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하며 그 과정은 매우 주관적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다. 만약 하버드 대학이 우리나라의 대학들처럼 선발기준의 정당성을 타인들에게 입증해야 했다면 결국 객관식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미국 학생들도 객관식 시험 준비를 위해 입시지옥을 겪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먼저 대학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좋은 대학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좋은 대학간의 경쟁을 막아주는 방패는 주로 수도권 대학에 대한 학과, 학교의 신증설 및 정원 억제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란 명분으로 대학 자유의 제한을 계속한다면 결국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학간의 치열한 경쟁을 전제로 학생 선발을 전적으로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 기업들은 자유롭게 구성원을 선발할 수 있다. 왜 특정한 지원자를 뽑았는가에 대해 기업 밖의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직원을 잘 뽑았는지 여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기업이 성공하느냐의 여부로 평가받게 된다. 대학도 예외일 수 없다. 대학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또 신입생의 선발이 자율에 맡겨져 있다면 이 때 가장 성공적인 대학은 졸업 후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쌓거나 가장 높은 보수를 받게 해주거나 또는 사회에서 명성을 얻을 졸업생을 배출하는 곳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판별하는 것은 역시 매우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 다만 분명한 기준은 미래의 성공할 졸업생을 뽑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학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대학과 대학입시를 더 이상 정부의 통제 아래 두어서는 안 된다.

#### 4. 극복해야 할 난관들

교육의 자유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난관은 새로운 세기를 살아남기 위해, 또 번영된 나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며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이념의 변화이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이른바 열린 교육 사회를 구축한다는 이념이 대학교육에까지 파급되어 우리의 대학교육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열린 교육 이념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등과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공존해야 한다. 평등은 '열린 교육'을 지향하겠지만, 자유는 경쟁을 유도하고 불평등을 낳는다. 그렇다고 불평등이 항상 사회에 불이익을 끼치는 것만은 아니다. 열린 교육을 자랑하던 북한, 개방 교육을 국시로 삼았던 중국은 교육의 평등도 교육의 수월화도 모두 성공시키지 못했다. 한편, 스탈린 치하의 소련은 교육 기회의 평등화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대학입학은 엄중한 경쟁위주의 교육체제를 확립하여 마침내 미국보다도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들 세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일대 세기적인 실험을 이미 해준 셈이다.

다음은 이해 관련 집단의 반응이다. 고교 평준화를 개혁하고 대학 입학을 무시험제로 하여 각 대학이 다양한 판별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한다고 할 때, 또 학생등록금을 자율화하고 학교간, 교원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 계층간 위화감이 과민 반응하고 경쟁체제에 불안해 하는 학부모와 일부 교원집단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려고 할 것인지의 과제이다. 그러나 사실 계층간의 위화감이 있고 대립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통합과 조정 또한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것이다. 특별한 사립학교를 설립한다던가 다양한 학생 선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있는 자'만의 특혜가 될 수 없다. 없는 자의 자녀 중 우수한 학생은 장학금의 혜택을 받아 면학의 길이 열리며 더 유익한 사회적 상승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장학금 제도에 뜻있는 인사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유인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끝으로 또 다른 큰 난관은 교육재정의 문제이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개혁도 재정의 뒷받침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역대 정부는 교육사업에 중점투자를 한다거나 GDP의 일정비율을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제시하곤 했으나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된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의 수월성의 추구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살아남기 위한 국가적 핵심전략이다. 우리는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50조 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을 기억한다. 문제는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당연한 교육의 위기를 IMF 위기보다 가벼이 여긴다면 우리의 미래는 안심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한겨레**

#### 조용기

학교법인 우암학원(육산중학교, 육과고등학교, 전남과학대학, 남부대학교) 설립자 겸 학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장 겸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장으로 활동 중이다.